

미래전략 종합결과보고서

- 노동이 존중되는 평등복지통일국가 -

CONTENTS

I. 정세 : 전략수립을 위한 배경	3
1. 객관정세 • 3	
2. 노동운동 역량 • 7	
II. 미래노동사회비전	9
1. 한국노총이 지향하는 미래노동사회비전 • 9	
2. 미래노동사회 비전의 상 • 12	
3. 7대 목표 • 20	
III. 미래전략 100대 과제 및 17대(12+5) 핵심과제	30
1. 미래전략 100대 과제 • 30	
2. 미래전략 17대(12+5) 핵심과제 • 36	
3. 노동-복지 12대 핵심과제 • 37	
4. 조직-연대 5대 핵심과제 • 41	
5. 시기분류 • 43	
6. 실현방안 • 44	
IV. 17대(12+5) 핵심과제의 실행계획	46
1. 12대 노동-복지 과제 • 46	
2. 5대 조직-연대 과제 • 54	

I. 정세 : 전략수립을 위한 배경

1. 객관 정세

1) 대외 정세

(1) 세계 경제 : 미국발 더블딥 + 유럽 재정위기

경제위기 이후 미국은 고용, 부동산 등 실물경제의 부진을 수출과 양적 완화를 통해 해결하려 하였으나 모두 난관에 봉착한 상황이다. 소비자신뢰 붕괴, 기업심리 악화, 주택경기 침체,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앞으로 몇 년간 부진한 성장세와 고용 불안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으로 더블딥에 봉착했다. 유럽에서는 취약국으로부터 시작한 경제위기가 선진국에까지 파급되고 있어 그리스에 이어 이탈리아, 스페인까지 채무불이행(디폴트)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현재로서는 미국과 유럽발 악재들이 단시간 내에 개선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2) 기후변화 - 산업에 미칠 영향 대비

이상 기후로 인해 재난, 가채량(可採量) 고갈 등 ‘지구온난화’는 21세기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이자 국가를 초월하여 해결해야 하는 지구적 문제이다. 아직까지 구속력있는 협약이 없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한국은 세계 9위의 온실가스 배출국가로서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제조업과 발전산업의 온실가스를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이들 산업의 한국경제 기여도(제조업은 GDP부가가치대비 29%, 고용에서 20%를 차지)를 고려한다면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고, 일자리소멸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하다.

(3) 동북아 정세 -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민족분단 하에 한국은 다른 국가와 달리 지정학적 리스크를 안고 있으며, 특히, 한반도를 중심으로 미국과 일본 대 중국과 러시아가 첨예하게 맞닿고 있는 세계유일의 분단체제, 이념대결의 장이다. 한반도 문제를 놓고 6자회담 참가국

들은 북미 간 관계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9.19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현시점에서 6자 회담이 담보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실행단계를 거치게 될 것이다. 하지만 현 정부 출범 이래 줄곧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무시한 채 대북적대정책을 고수하면서 남북관계의 완전한 경색 및 불안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

2) 국내 경제

(1) 한국 경제 : IMF, 2008년에 이은 제3의 경제위기 불안

물가급등, 가계부채, 실질임금 하락 등으로 하반기에는 더욱 어려운 경제환경이 조성될 것이며, 단기간에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내외의 전망이다. 현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3%에 육박하고 있으며 수입물가 불안, 하반기 공공요금 및 개인서비스요금 인상 등으로 하반기에도 5%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가계의 부채가 사상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으나 부채상환능력은 악화되었다. 올해 들어 실질임금은 마이너스 대를 기록하는 등 총체적으로 가계경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침체된 경제는 대외의존도가 높고 체질이 약한 한국경제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올 것이다. 최근 환율의 급등, 금융시장의 불안 등 위험한 조짐은 한국경제에 제3의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우려에 더욱 불을 붙이고 있다. 정부도 경제위기에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며 비상체계를 가동하며 ‘위기’국면을 공식화하였다.

(2) 인구사회구조 변화 - 저출산고령화

오늘날 한국사회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가장 빠른 속도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닥쳐올 미래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사회경제적 충격과 사회적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올해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이미 노인인구는 11.3%를 기록하였고, 출산율은 세계 꼴찌 수준인 1.15명에 불과하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미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7년경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50년에는 절반으로 줄어 심각한 노동력 부족 현

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당장 720만명에 달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은퇴가 진행되어 노동의 양과 질 저하, 내수시장 위축, 조세수입 부족으로 인한 정부의 재정악화, 사회보장비용 증가, 공적연금의 재정적 부실 등이 발생할 전망이다. 또한 공적연금 등 노후준비가 부실하여 노인빈곤층이 급증할 것이다.

(3) 산업구조 변화

한국 경제의 중추를 담당해온 제조업이 지난 90년대 중반 이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취업자 비중이 점점 낮아지고 반대로 서비스업 등의 3차 산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내수산업의 장기 침체 속에서 수출 위주형 산업이 국가경제를 주도하고 있다. 수출을 주도하는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이 외환위기 이후에도 7% 이상을 유지하면서 최근까지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현재는 4%대에서 머물고 있다.

한국의 대외의존도(=수출입의존도)는 26.9%에 달해 지나치게 높으며, 수출에 의한 취업유발계수가 낮기 때문에 고용창출 여력이 감소한다. 또한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의 88%가 속해있는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착취적 하청관계라는 속에서 기업 간 차별을 확대시켜 노동시장의 계층화 혹은 양극화 문제를 일으킨다.

(4) 정치 정세

최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둘러싸고 정치 환경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번 선거는 2012년 20년만에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총선, 대선의 신호탄이나 다름없다.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정점으로 펼쳐진 획기적 변화들은 2010년 지방선거 이후 꾸준히 높아진 국민들의 복지의식과 성장개발주의에 대한 염증, 소통없는 일방적 국정운영 등에 기인한다. 최근 한국노총 설문조사에서도 조합원의 82%가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이 잘못되었다고 응답했다. 우리 사회의 20-40대 중견층에서 나타나고 있는 대안정치에 대한 갈망이 표출되었던 ‘안철수 현상’은 정책이 실종되고 권력투쟁만 난무한 한국정치의 고질적 문제를 표현해주는 것이었다. 2012년 총대선까지 펼쳐질 정치일정에서 새정치에 대한 열

망과 모바일시대에 익숙한 젊은 세대들의 빠른 정보력과 응집력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다.

3)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1) 노동시장

잠재성장률이 5%대로 떨어지고 성장에 따른 고용 효과가 감소하면서 전반적인 고용창출 잠재력이 하락하고 있다. 특히, 전체 실업률보다 두 배 이상 높은 100만 청년 실업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논의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선진국에 비해서 낮은 상태에 머물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는 감소하고 중위임금 2/3 이하인 저임금 일자리는 증가하고 있다. 전체 노동자 가운데 26.5%가 저임금 노동자이며, 정규직은 16명 중 1명, 비정규직은 2명 중 1명이 저임금 계층에 속한다. 저임금 노동자의 대부분은 근로빈곤층으로 전락하기 쉬우며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면서 사회안전망의 혜택도 받지 못해 빈곤과 박탈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노동소득분배율이 2006년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6년만에 60% 아래로 떨어졌다. 노동생산성의 지속적 상승과 단위노동비용의 감소로 기업 경쟁력은 강화되고 있는데도 노동에 그만큼의 몫이 돌아가지 않고 있다. 임금소득의 불평등 또한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상위 10%와 하위 10%의 시간당 임금 격차는 2010년 8월 현재 5.25배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양극화로 인해 기업규모별, 고용형태별, 성별로 임금수준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다.

기업의 상시 구조조정이 보편화됨에 따라 고용불안심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비정규직, 간접고용의 확산으로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 중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수준은 월평균임금 기준 47.8%에 지나지 않고 비정규직의 사회보험가입률은 40% 미만으로 광범위한 복지의 사각지대에 남아 있다. 특히,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이동은 15% 수준으로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다. 한국사회에서는 한번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으로 남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노사관계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타임오프는 유럽과 달리 유급 노조활동 시간의 상한선을 정하면서 전임자 축소로 귀결되어 노조활동을 크게 제약하고 있다. 특히, 노조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중소기업은 기본적인 노조 활동을 담보하기 위한 인적·물적 토대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상급단체 간부들의 급여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노정간 갈등도 더욱 심화되고 있다. 2011년 7월부터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되면서 사용자들이 노조설립에 개입하여 어용노조가 출현하고, 기존노조에서 분화하는 조직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개별사업장 단위에서 노동운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기획 탄압 등이 진행되고 정부 차원에서는 사용자의 민주노조 파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개악을 계속 시도하고 있는 형국이다.

또한 전국적으로 노사분규 양상을 보면 파업건수는 30건으로 전년보다 줄었으나 파업으로 인한 전체 근로손실일수는 8.0%나 증가했다. 투쟁을 전개한 몇몇 사업장의 갈등이 심각하였고 그것으로 인해 장기간 파업이 전개된 것이다. 작년부터 진행된 한진중공업 노사분규는 올 초 사측의 170명 정리해고와 이에 맞서 전개된 크레인 고공농성투쟁으로 전국적인 태풍의 눈으로 작용하고 있다. 개별사업장의 장기적인 노사분규가 전국적인 영향력, 파급력을 가지게 되었으며 한국사회에서 정리해고를 둘러싼 싸움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은행권 최장기 파업을 기록한 SC제일은행의 분규 등 금융권의 노사 갈등 장기화와 함께 공공 부문을 포함한 대졸 초임 삭감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도 가속화되고 있다.

2. 노동운동 역량

1) 노조 대표성의 위기

한국의 노조 조직률은 1989년 19.8%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1990년부터 조

직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0년 현재 10.4%(한국노총 5.4%) 수준이다. 노조 조직률이 하락하는 이유는 서비스업 부문의 팽창과 비정규노동자의 상대적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이 주된 원인이다. 정규직-대기업-남성노동자 중심의 내부적 비대칭성으로 인해 절대 다수의 미조직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데 한계를 갖고 있다. 또한 낮은 노조 조직률과 함께 단체협약적용률이 유사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은 현재 조직된 노동자들을 위주로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나머지 대다수 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가 함께 구현될 수 있지만 때로는 배제되기도 하므로 노동조합의 대표성은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2) 기업별 노조체제의 한계

기업별 노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노동운동 발전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기업별노조는 현장의 힘을 기업별로 분산시킬 뿐만 아니라 분권화시킴으로써 상급조직의 독자성을 약화시키고 조직간 활동의 중복, 상급조직의 인적·물적 자원을 취약하게 만든다. 또한 기업 내에서 목전의 이익을 추구하는 실리주의적 운동노선을 강화시킴으로써 보다 넓은 범위의 운동영역으로 활동을 넓히기 어렵다. 지금과 같은 제약적 노조체제로는 노동운동의 투쟁의 당위성 혹은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어렵고 지지기반을 폭넓게 형성하지 못해 노동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정치전선구축이 기본적인 한계에 부딪치게 된다.

3) 시대에 조응하는 비전·이념·전략의 부재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금융세계화,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노동자 서민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노동운동이 위기의 시대를 타파할 미래사회, 대안사회에 대한 비전과 이념, 전략이 부재하다. 최근 무상급식으로 시작된 복지국가 논쟁에서도 노동운동은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조직 안팎으로 제기되는 다양하고 복잡한 과제를 풀어나가는데 단일하고 일관성있는 증거를 제시하여 노동운동 역량을 효율적으로 집중·분산하여 운동의 성과를 내실있게 축적해야 한다.

II. 미래노동사회비전

노동이 존중되는 평등복지통일국가

1. 한국노총이 지향하는 미래노동사회비전

2011년 현재 한국사회는 신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지탱하는 차별체제와 이를 신봉하는 보수정치세력의 집권으로 ‘노동’의 가치가 실종되었고, 노동은 단지 성장을 위한 부속물로 전락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시장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즉, 자본과 부를 가진 자가 무한경쟁의 승자가 되는 근본적인 결함과 모순을 안고 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의 근본적 사회 모순을 혁파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하여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중시하고,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사회민주주의’이다.

5년전 한국노총은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면서 ‘사회개혁 노조주의’를 운동이념으로 정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사회의 모습을 ‘평등복지사회’임을 밝혔다. 사회개혁 조합주의는 신자유주의의가 만들어낸 차별, 억압, 착취, 경쟁을 평등, 자유, 존엄, 공정의 사회로 변화,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사회민주주의를 토대로 하는 노동조합운동의 가치를 의미한다.

5년이 지난 현재, 한국사회에서 ‘평등복지사회’는 과연 구현되고 있는가?

안타깝지만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더욱 더 기세를 확장하였고, 숨쉴틈없는 경쟁과 유연화체제 속으로 노동자들을 집어삼키고 있다. 이를 조정해야 할 국가는 자기책임을 방기한 채 70년대 개발독재시대를 재현하고, 성장제일주의 기치아래 일방통행 소통부재식 국정 운영으로 노동의 가치는 땅바닥에 떨어졌다.

이른바 ’87년 노동자대투쟁이후 활성화되었던 노동조합운동은 20년이 지난 현재, 당시 꿈꿔왔던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이 아니라 ‘노동자가 천대받고 멸시받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

인간성 상실과 자연환경의 파괴, 고용과 소득불안의 극대화, 국가 간, 개인 간 소득격차 확대, 세계적 경제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극으로 치닫고, 인간과 노동자의 희망을 일궈내야 할 노동운동은 신자유주의 공세로 방어체계가 붕괴될 위기에 놓여 있다.

작금의 현실 속에서 한국노총이 지향하는 미래 노동사회의 상(象)은 무엇인가?

노동자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광풍 속에서 단결을 공고히 하고, 인간과 노동이 존중받는 평등복지의 희망찬 새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억압과 착취를 깨부수고 수많은 희생을 통해 쟁취한 민주주의를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반민주세력의 도전으로부터 지켜내고 외세의 간섭에 맞서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조국통일을 앞당겨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조합운동이 뼈를 깎는 자기반성과 끊임없는 혁신으로 무장해야 하고, 경제적 이익에 앞서 정치·사회적 지위를 향상하고, 사회부조리를 혁파하기 위한 사회개혁에 앞장서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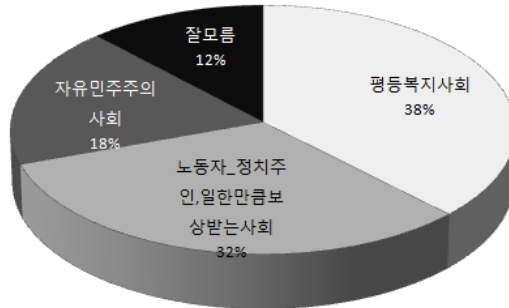
노동조합의 근간은 현장이다. ‘교섭과 투쟁’이라는 현장의 무기를 들고, 시민사회 등 민주진보진영과 어깨를 걸어야 하며, 국가의 제도와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인간다운 새세상을 위해 흔들림없이 전진해야 한다.

한국노총이 바라는 대안적 사회의 모습은 무엇일까?

한국노총이 실시한 설문조사¹⁾ 결과 한국노총이 지향하는 미래 사회상에 대하여 “누구나가 소외되지 않고 복지를 누리는 평등지향적인 복지사회”가 38%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노동자가 정치의 주인이 되며 노동자 각자가 능력에 따라 일하고 일한 만큼 보상받는 사회”로 약 32%가 응답하였다. 이 밖에 “시장질서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18%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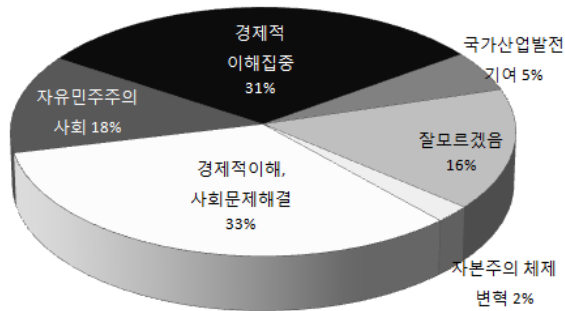
1) 한국노총은 미래전략 수립을 위하여 2011년 8월 19일~9월 9일까지 한국노총 조합원 중 소속 산별과 거주지역 분포를 고려하여 무작위로 표집한 12,5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3,843명이 응답했다

한국노총이 지향하는 미래 사회상



또한, 한국노총의 운동기조를 묻는 설문에 대해서는 “조합원의 경제적 이해 증진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이 “조합원의 경제적 이해-임금, 기업복지, 근로조건에 집중”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한국노총의 운동기조 방향은?



2006년 한국노총이 주창한 사회개혁 조합주의는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지적하며 ‘평등복지사회’로 나아가자는 방향타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 현장 설문조사 결과에서 확인되었다.

따라서 한국노총은 5년전 제시한 “평등복지사회”를 계승하고, 이를 확장발전시켜 “노동이 존중되는 평등복지통일국가”를 미래노동사회의 비전으로 정하고자 한다.

평등복지통일국가는 보편적 복지, 재벌체제 개혁과 시장경제에서 조정경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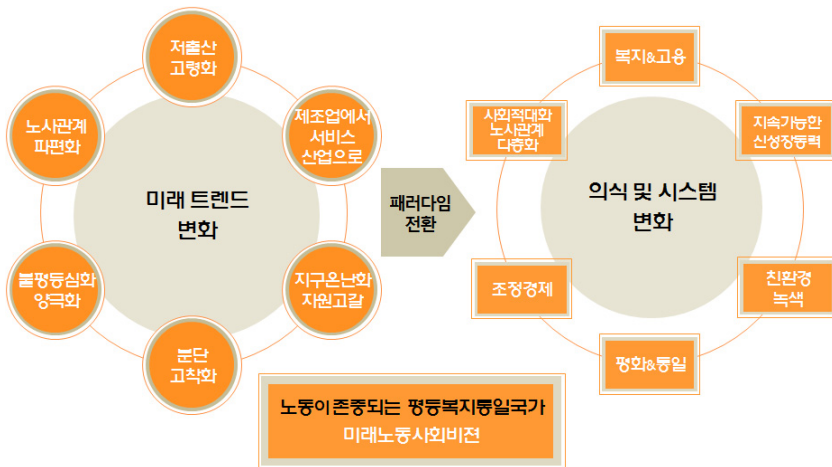
델로의 전환, 분단을 넘어 통일조국 하에서 동북아시아의 평화공존 시대, 화석 연료에 기초한 산업의 녹색경제로의 전환, 분권화·파편화된 노사관계의 다층화를 통한 실질적 사회적 대화체제로의 전환, 고용, 임금 등 노동시장이 안정화된 미래노동사회를 말한다.

한국노총이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동에 우호적인 민주진보적 정치권력이 등장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사회변혁과 사회내 헤게모니 장악 그리고 이를 수행할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전략적 과제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2 미래노동사회 비전의 상

한국노총이 지향하는 미래노동사회비전은 “노동이 존중되는 평등복지통일국가”이다.

“노동이 존중되는 평등복지통일국가”는 평등, 복지, 녹색, 통일이 하나로 조화를 이루는 미래노동사회이자 노동자가 꿈꾸고, 만들어나갈 새세상을 의미한다.



현재, 한국사회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인구구조, 산업구조, 노동시장, 노사관계, 자연환경, 지정학적 특수성 등 8가지 주객관적인 환경변화를 토대로 4대 비전의 상(평등, 복지, 녹색, 통일)을 마련한 것이다.



1) 평등국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평등권과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성별, 장애, 연령, 고용형태 등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차별은 “성별, 고용형태, 학력,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 학교, 국적,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의 지위,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병력(病歷) 등을 사유로 발생하며 고용 및 직업생활에 있어 주로 나타난다.

따라서, 미래평등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전반에서 팽배해있는 차별을 개선해야 한다. 특히, 고용 및 직업생활상의 차별해소로부터 시작하여 현행 노동관계법상의 차별규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다양한 형태의 고용 상 부당한 차별을 금지해야 하며, 그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 구제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최고의 통치수단인 헌법은 노동3권(33조 1항)과 노동조합의 헌법적 시민권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제도와 정책, 관행에 있어서는 노동자의 기본권에 대한 보호와 노동가치에 대한 존중은 매우 취약하다.

한국사회에서 인간다운 노동현장을 만들고 노동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인간다운 노동을 위해서는 사문화되고 있는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현실화하는 동시에, 무차별적인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중단하고, 노동3권을 공무원, 교사, 특수노동자를 포함하는 모든 일하는 사람들에게 보장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의 친재벌·반노동정책으로 노사관계는 파탄지경으로 치닫고 사회적 대화는 실종되었다.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파괴하는 노동관련법·제도의 개악을 추진하였고, 전임자임금지급 금지, 복수노조 강제적 교섭창구 단일화, 비정규직 양산, 공기업선진화대책 등을 정부가 강제로 개입하여 헌법위에 균립하는 초법적 조치를 일삼고 있다.

자본주의체제의 안정장치이자 이해조정장치인 노사관계는 민주주의를 가름하는 중요한 척도이다. 미래노동사회가 평등국가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사회적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고, 이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권리를 지키기 위한 노동조합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또한, 노사관계 작동원리를 통해서 사회적 불만과 모순을 해결해 나가야 하며, 국가차원에서 경제사회적 의제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되고 해결해야 한다.

특히, 기간제, 시간제, 파견, 용역, 사내하청, 특수고용 등 고용형태를 달리하는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중 절반에 해당한다. 임금은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노동조건과 복리후생, 법정사회보험조차 1/3정도 밖에 적용을 받지 못하며, 상시적으로 극심한 고용불안에 놓여있다.

산적한 노동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노동자의 이해와 요구에 직결되는 노동관련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요구되고, 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표하는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메커니즘을 법제도적 개선을 통해 근절시켜야 한다.

대·중소기업간, 수출·내수의 불균형과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한국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이다.

현재 한국사회의 양극화와 불균형을 초래하는 핵심적인 원인은 기득권층의 ‘자원과 부(富)의 편중과 대물림’으로 집약되는 ‘불공정성’에 있다 ‘공정한 경제’라는 기반과 토대 위에서 국가는 이를 위한 조정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적

극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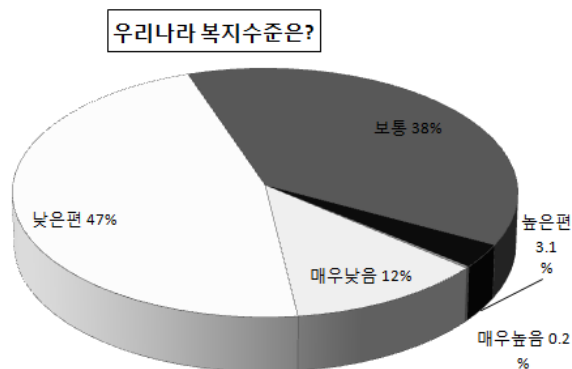
공정한 경제의 실현을 위해서는 고속성장의 최대수혜자인 재벌의 전면적인 개혁과 대기업의 사회경제적 책임 강화,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계의 근절과 중소기업의 지원 및 육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재벌경제를 정의로운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법제도의 개혁은 △재벌소유 및 경영구조의 민주화와 편법적 경영승계의 근절, △총액 및 상호출자금지, 금산분리의 제도입 등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강화, △성과배분 및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등 대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책임 강화, △토건자본의 개발이익 환수제도 강화와 사회환경 분담금의 도입, △중소기업 사업장 조합단위의 공동납품협상 제도허용(담합행위 처벌금지) 등이 단행되어야 공정하고 평등한 미래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2) 복지국가

(1) 부실한 사회복지에서 현재 한국사회 최대 정치적 사회적 화두는 ‘복지’이다.

한국은 사회복지가 부실하여 GDP대비 공공 사회복지 지출규모는 2010년 8.3%로 OECD 회원 중 가장 낮다. 한국노총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에 대하여 낮다는 응답이 59%였고, 높다는 응답은 3.3%에 불과했다.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으로 확인된 ‘복지’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최대 정치적 사회적 이슈로 부상되었다. 복지 이슈는 이제 민주진보의 전유물을 넘어서 포퓰리즘으로 비하하던 보수권력마저 입장을 선화하면서 2012년 권력재편기 이른바 총선·대선의 결정적 이슈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이같이 보편적 복지가 담론으로 제기되는 것은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하고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근로빈곤층이 증가하는 등 불안하고 위태로운 현실에 대한 반증이다. 전체임금노동자의 50% 이상이 비정규직이고, 중소기업자들은 줄도산 하고 있으며, 청년실업률은 날로 높아지고, 여성들은 저임노동과 돌봄 노동으로 고통을 겪는 등 많은 사람들이 생존의 위기에 내 몰리고, 중산층마저도 교육, 의료, 노후, 주거, 고용 등 구조적이고 만성적인 불안에 직면해 있다. 두 차례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시장만능, 성장제일주의 정책으로는 교육, 의료, 노후, 주거, 고용 등 일상의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복지국가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이 실현되는 사회를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사회보장체계가 보편주의 원리에 따라 설계되고 작동되어야 한다.

복지와 경제는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 관계가 되며,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은 공존되어야 한다.

민간부문, 공공부문 모두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근로빈곤이 사라지며, 실업에 대한 안전망도 고도화된다. 현재와 같은 극심한 양극화와 불평등은 사라지며, 정부에 대한 신뢰와 사회연대 의식은 높아진다. 결론적으로 복지국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보장되면서도 사회정의와 민주주의가 심화되는 사회를 의미한다.

(2) 2012년 총·대선을 거쳐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한 2013년 복지국가의 기초 마련

현재 한국 노동, 시민사회 진영은 2012년 권력재편기 과정에서 신자유주의 재벌체제를 변혁하고, ‘2013년체제’ 즉, 복지국가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복지국가는 △공정한 경제, △좋은 일자리, △인간다운 노동,

△보편적 사회보장, △평등한 교육기회, △돌봄의 사회화·공공화를 지향하고 실현되는 사회를 말한다.

3) 녹색국가

(1) 이명박 정권의 녹색성장은 녹색분칠로 둔갑한 정책이다.

현 정권은 2008년 8월 15일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언하며 대통령직속기관으로 녹색성장위원회를 2009년 2월 16일 출범시켰고, 2009년 11월 17일 국가 감축목표를 “배출전망(BAU)대비 30%감축('05년 배출량 대비 -4%)”로 확정하였다. 정부주도로 일방적인 기후정책을 수립하고, 경제사회주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수단이 부재하고 화석연료에 기반한 일자리 감축에 대하여 그 대책이 전무하다. 또한, 경인운하, 4대강사업 등 토목건설분야에 집중된 투자(32조원)가 녹색성장 투자로 둔갑하였고, 대체에너지개발에 있어 재생에너지(태양력, 풍력 등) 대신에 ‘원자력 중심’의 정책 오류를 보이고 있다.

낮은 감축목표치와 고용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9위, 누적배출량은 22위로서 경제규모 세계10위권국가가 개도국 수준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각 부문별 감축목표의 할당은 곧바로 각 부문 산업의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각 부문별 감축목표를 설정하면서 고용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 연구하지 않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노동조합과 대화하려는 시도가 일절 없다.

(2) 인류의 미래를 책임질 “녹색” 으로의 전환을 시작하자.

지구 온난화와 화석연료의 고갈은 금세기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이다.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인류는 재앙을 맞이할 수도 있다. 특히, 기후변화는 국가경제와 산업의 틀이 바뀌는 지각변동이다 지속가능한 사회경제 체제로의 전환과 자원·에너지 안정적 확보 차원에서 신성장동력으로서 녹색산업 육성은 새로운 성장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의 영향으로 위축, 쇠퇴, 소멸되는 산업분야에 대한 대책으로서 친환경대체고용과

이에 수반되는 보상, 교육, 재훈련 프로그램이 먼저 갖춰져야 한다.

녹색경제, 녹색일자리로 이행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사회적 대화와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경제적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제조업 중심의 고용과 성장구조를 녹색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유도방법, 전문인력 육성, 기술개발, 촉진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정부를 비롯한 노동, 시민, 환경, 학계, 기업 등 국가사회의 주체들이 참여하는 범국민 녹색테이블을 만들어야 한다.

더불어 기후변화 노사민정 플랜수립, 국민공동행동과 프로그램, 매뉴얼, 강제장치, 점검과 평가 등이 녹색테이블의 중심의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정부와 노사, 시민이 합동으로 지금부터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총체적 전략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다.

4) 통일국가

(1)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자 냉전이데올로기의 마지막 남은 섬, 코리아

남과 북으로 갈라진지 66년, 분단은 남북 모두에게 과도한 국방비용을 전가하고, 민족내 이질성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경제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여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마이너스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조국분단은 노동조건 개선과 고용안정을 요구하는 합법적 교섭마저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불순분자의 책동’으로 매도하고, 공익사업장의 파업을 제한하면서 노동자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있으며, 나아가 정치활동 및 사상의 자유까지 가로막고 있다. 또한, 분단이데올로기로 인하여 천문학적 무기구입과 미군주둔비용이 노동자 서민에 전가되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보편적 복지를 저해하고 있다.

(2) 일촉즉발의 위기로 변모한 한반도 동북아시아

이명박 정권은 초지일관 대북적대정책을 구사하며 북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고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남북관계는 완전한 경색과 불안 상황(금강산관광 중단, 대화채널 단절, 천안함사태, 연평도 포격 등)이 연출되었고, 남측은 6자회담 및 동북아 역내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상실하여 미, 일에 대한 의존성이

확대되었다. 또한, 북핵, 북의 대외경제전략 등에 대한 일체의 개입력을 상실하였다.

(3) 평화와 화해시대로의 전환과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과 준비

통일은 이념이 아닌 현실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통일은 자주와 평화, 민족 대단결의 남북합의서 기본정신과 6·15공동선언에 입각해서 민족 간 대결을 종식하고, 단계적으로 더 큰 하나로 나아가 중국에는 1민족1국가1체제의 완전한 결합을 이루어내야 한다.

특히, 당면해서 이명박 정권의 일방적인 대북적대정책은 전쟁으로 이어져 민족이 공멸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화해와 평화로 정책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또한, 통일은 남측이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인구사회구조가 변화하고 있어 가까운 미래에 노동력 부족이 초래될 수 있는바 북측의 고급 노동력과의 결합을 통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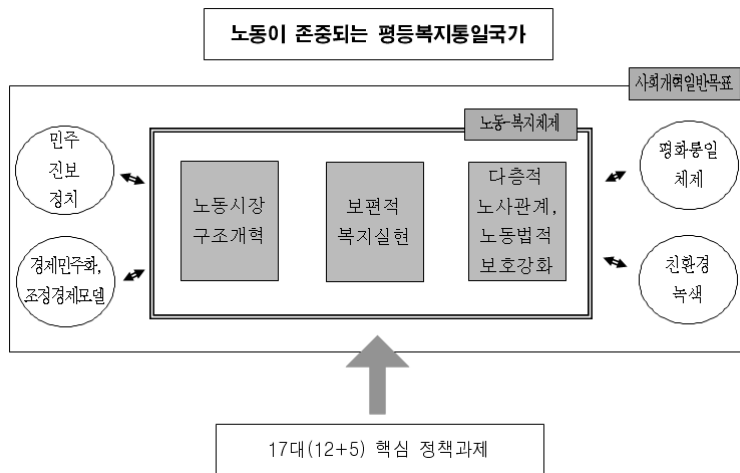
따라서, 평화화해무드의 조성과 함께 남북경협 확대, 북의 도로, 철도, 발전 등 SOC투자, 천연자원 개발 등 남북 경제공동체를 형성하여 남북경제에 실질적인 도움과 활성화를 달성하고, 당국 간 뿐만 아니라 민간 자주적 교류 확대, 사회문화 교류 협력 확대를 통해 동질성을 회복해야 하며, 통일비용 마련을 통해서 미래통일국가를 준비해야 한다.

또한, 한국노총은 노동과 관련된 전문특화분야에 있어 남북노동자연대 교류에 적극성을 보여야 하고, 통일국가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 산업, 노동정책의 영역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는 현재 개성공단에 대한 노동법규의 적용과 경협 확대 시 필연코 발생할 수 있는 남측 한계기업의 북 진출 시 북 노동자에 대한 노동력 착취, 북 노동자의 남측영역 기업에 노동력 제공 시 유발될 노동권 및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북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동기본권을 대변할 대책들을 사전에 면밀히 수립해야 한다.

통일은 우리 민족끼리 그리고 분단의 고통과 희생이 전가되어 이를 온통 감내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우리 민족은 자기 운명을 자신이 책임지고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자주성과 민족성을 고수하기 위한 전민족적 운동에서 남북노동자들이 선봉에 서야 한다. 또한,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가로막는 대결과 분열의 법적, 제도적 장치를 철폐하기 위해 더욱 힘차게 투쟁해 나가야 한다. 조국분단을 한 세기 안에 극복하고 완전한 통일국가를 건설해야 한다.

3. 7대 목표



1) 사회개혁 일반목표

(1) 민주진보정치

이명박 정권 출범이래 지난 4년동안 한국사회는 끊임없는 시행착오를 거듭해왔다. 행정, 입법, 언론 권력을 독점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대화와 타협보다는 손쉬운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선택했고, 그 결과 오만해졌다. 오만과 위선은 소통부재로 이어지면서 국민 위에 군림했고, 민주주의의 기초질서를 붕괴하고, 독재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대북관계 악화와 전쟁위협, 날조된 복지포퓰리즘 공세, 공권력의 대국민 탄압과 인권 유린, 살인적인 물가폭등, 영세자영업의 몰락과 비정규직 대량 양산,

500만 실질실업과 양극화 심화로 작금의 서민생활은 파탄지경에 내몰려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그 결과 성난 민심은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에 등을 돌리고 있으며, 계층과 연령, 지역과 성향에 관계없이 정부에 대한 불만과 민심이반으로 이어졌다.

대한민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사고를 쏟아내는 뉴스메이커가 되고 말았다. YTN 사태, 미네르바, 용산 참사, 촛불집회, 전직대통령 죽음, 집회 및 시위, 인터넷 등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었다. 심지어 노동자들이 사용자에게 매질을 당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연이어 목숨을 끊고 있으며, 쌍용차 등 구조조정에 맞서 생존권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에게 경찰은 집회 강제 해산과 무자비한 폭력진압과 대량연행·구속으로 대응했다. 그 결과 지금 대한민국은 반이성적인 공권력의 무자비한 폭거 앞에 민주주의가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또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분쟁지역이 되고 말았다. 2009년 3월 천안함 사태, 11월 연평도 지상 포격으로 한반도 동북아 정세는 60년 전으로 회귀하여 ‘신냉전시대’가 도래했다. 지난 십여년간 어렵게 쌓아올린 화해와 협력의 평화공존체계가 현 정부의 대북 적대정책으로 한반도는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가장 높은 ‘벼랑끝 대결로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

자유주의 민주세력의 실패한 정책을 발판으로 이를 잃어버린 10년으로 비유하며 등장한 이명박 한나라당 수구보수세력은 대화와 타협이 아닌 소통부재와 힘의 정치를, 화해가 아닌 대결을 이어갔다.

피흘려 이룩한 민주주의가 지켜지고, 진정한 사회개혁을 통해서 보편적 복지와 국민 모두의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2012년 권력재편기 과정에서 반노동·친재벌·보수성향의 현 정권을 심판하고, 진보·민주진영의 집권을 실현해야 한다.

또한, 노동자가 정치를 방관하고 포기하는 순간 민주는 독재가 되고, 진보는 극단적 교조주의자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래노동사회에 있어 민주진보정치의 구현과 발전을 위해서는 노동자가 정치의 주인으로 등장해야 하며, 노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세력화로 나서야 한다.

(2) 경제 민주화

리먼사태이후 전 세계는 구조적 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금융거래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은 지금도 여전히 패닉상태에 놓여 있다. 선진경제권 정부들은 국제적 공조를 통해 일시적으로 금융위기를 극복한 듯 했으나 3년뒤 미국과 유럽은 재정위기의 부메랑을 맞았고 초대하지 않은 더블딥은 세계경제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가고 있다.

세계를 호령하던 군사적, 경제적 패권국가 미국이 세계경제위기의 진원지가 된 것은 70년대 오일쇼크이후 시장만능주의를 추종하며 신자유주의정책을 추진한 결과 때문이다. 레이건 정부는 top-down 모델방식의 감세, 규제완화, 노동유연화 정책을 추진했고, 구매력을 상실한 대다수 국민은 부채에 의존하며 생활을 유지했다. 고삐 풀린 금융자본은 자기복제방식으로 파생상품을 만들어냈고, 그들이 맹신했던 “보이지 않는 손” 즉, 시장은 작동을 멈췄다.

2년전 글로벌금융위기 당시 이명박 정권은 30년전 미국에서 이미 실패한 전략인 신자유주의적 top-down 정책을 모방했다. 그 결과 2년이 지난 현재 영세자영업은 몰락했고, 가계부채는 200조원 불어나 900조원에 육박했으며, 양극화는 더욱 더 심화되었다.

공교롭게도 세계 주요 각국들은 이때 70년대 오일쇼크이후 구사해오던 ‘안정화전략을 유지하면서 이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정책변화를 시도했다. 미국, 유럽, 브라질 등에서 최저임금을 고을 인상했고, 일본은 파견금지, 우정국 기간제의 정규직화를 단행했다. 또한, 고용창출을 위해 운송인프라 현대화, 지식경제기반 강화,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녹색인프라 구축, 사회복지 증진, 여성 경활참여 촉진, 출산율 제고 등을 추진했다.

세계자본주의의 위기를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손(시장)’에 맡겨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적이고 강력한 시장개입을 통해서 자본을 규제하고 노동을 옹호하는 bottom-up경제모델을 선택한 것이다.

시장의 역동성과 경쟁 시스템의 효율성을 강조한 자유시장경제(liberal market economies)의 근본적 모순으로 세계경제가 요동치고, 반인간적이고 반민주적이

며 불평등한 질서가 자리 잡고 있다. 이제는 국가에 의한 직접적이고 강력한 개입과 시민사회에 의한 통제를 통해 시장경제의 문제점을 인간화와 민주화의 관점으로 치유하는 조정시장경제(coordinated market economies)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 왔다.

따라서 한국경제는 IMF사태와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미국-유럽발 재정위기로 인한 3차 경제위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과 내수에 기반을 둔 경기회복으로 대처해야 되고, 대규모 사회복지서비스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복지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괜찮은 일자리 창출과 적절한 임금수준의 보장, 이를 뒷받침할 노동조합의 사회적 영향력과 노사관계체계를 갖추고, 노동자경영참가에 기초한 생산성향상과 이들을 통한 선순환식 경제흐름을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이른바 ‘상향식(bottom-up) 경제학’이고, ‘더불어 함께 사는 경제모델’이며 미래한국사회가 지향하는 모습이다.

(3) 평화통일체제

현재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다툼이 상호 충돌하는 교착지점이자 대립점이 되고 있다. 미국은 대중국 봉쇄 전략에 기초해서 미일 군사 동맹을 강화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중화주의를 기초로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맹주로 군림하려는 해양 진출 야욕을 보이면서 동북아시아는 대결하는 장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북-중국-러시아로 이어지는 북방삼각과 남-일본-미국으로 이어지는 남방삼각 사이의 전통적인 대립구도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최근 미일 군사동맹이 공고해지자 러시아와 중국의 공조 또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세계공장이자 거대시장이며 세계 GDP규모 2위 중국과 3위이자 기술대국 일본, 자원대국 러시아, 10대 교역국가이자 신흥제조업강국인 한국이 위치하고 있는 동북아시아는 세계경제의 새로운 중심지로서 부상하고 있다 또한, 태평양과 대륙을 연결하는 한일해저터널-남북중단철도-시베리아횡단철도 루트는 21세기 새로운 실크로드가 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신자유주의 패권세력과 시장경제모델의 사회주의세력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

아에서 이해 충돌을 빚고 있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지역 패권을 둘러싼 양 세력간 대결은 한반도 남북 8천만 겨레와 동아시아 노동자 민중들에게 그 피해와 고통은 전가할 것이다.

대립과 갈등의 동북아에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로의 새로운 질서 창출을 추구하고, 동북아경제의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우선되어야 가능하다 한반도의 평화가 동북아 평화구축의 핵심이다.

또한, 동아시아 4국간 협력과 경제적 분업체제로의 재편을 추진하여 새로운 공동체 질서를 구축하며 평화와 번영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의 가교지점이자 거점이 되며,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역내 협력의 촉매자로서 협력국가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조국통일은 단순한 민족 간 결합을 뛰어넘어 세계평화와 신흥경제 중심지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는 한국경제에서 또 다른 수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제조업 공동화에 대응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는 고용관계와 산업의 발전에 기초하여 일자리의 양과 질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을 내포하고 있다.

(4) 녹색공동체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 백년동안 대기온도는 0.74℃ 상승했고, 금세기 말 지구 평균기온이 최대 6.4℃까지 오를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남극 유빙 600억t이 사라졌고, 북극빙하 면적의 46.2%(1980년대 대비 2007년 현재)가 녹아 내렸다.

왜, 그럴까? 온실가스가 지구 주변에 막을 만들어 태양에너지를 반사하지 못하면서 지구가 데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혁명이후 화석연료의 사용량이 급증했는데 자본주의 대량생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우라늄을 태워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데 이때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가 배출되어 결과적으로 지구가 뜨거워지는 원인이 된다.

지구가 뜨거워지면 단기적으로는 자연재해가 급증하게 된다. 집중호우, 슈퍼태풍, 가뭄, 폭염, 사막화 등 이상기후현상이 나타나고, 작물재배선 등 생태계

변화를 동반하며,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현재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이다.

만약, 이대로 지구가 계속해서 뜨거워진다면 당장 40년 내로 인류의 가장 전형적 에너지원인 화석연료의 가채량(可採量)이 한계에 달할 것이고, 지구상에 대부분 생물종이 멸종하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급격한 지구온난화에 대응해서 경제사회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국제사회는 1992년 유엔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을 채택했고, 후속합의서로서 1997년 교토의정서를 통해 선진국의 구속적 온실가스 감축을 정했다. 그러나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내뿜고 있는 미국이 비준을 거부했고, 세계공장인 중국과 인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은 여전히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반하지 않는 해방구에서 있다.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교토의정서보다 구속력을 동원한 강력한 체제로서 2013년부터 적용되는 포스트교토체제를 정하는 코펜하겐 당사국 총회(COP15, 2009년 11월)는 68억 인류의 운명을 가름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속력있는 협정 도달에 실패하였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에너지 전환이 필수적이다. 수소연료전지, 바람, 지열, 태양, 소수력,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이들은 화석연료와 달리 고갈될 염려가 없고,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인류가 영원히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다.

우리나라 온실가스의 대부분을 배출하고 있는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조선 등의 제조업과 발전산업은 온실가스를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하는데 이들 산업의 우리경제 기여도²⁾를 고려한다면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고, 일자리소멸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기후변화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국가경제와 산업구조의 변화까지 동반할 수 있는 기후변화대책을 정부가 대기업집단과 국책연구소 그리고 관료들로 구성된 녹색성장위원회를 만들어 일방적으로 정책을 만들고 있는 점이다.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하고 전문적인 집단이라 할 수 있는 환경단체는 물론이고,

2) 제조업은 GDP부가가치대비 29%, 고용에서 20%를 차지하여 가장 경제적 영향력이 큰 산업이다.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까지 짝꿍이식으로 배제시켰다. 온실가스 감축은 전 국민적인 운동으로 실천될 때 비로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더불어 일자리소멸로 귀결되는 기후변화에 정부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경제사회 전반에 놓고 노동, 시민, 환경, 기업과 ‘사회적 합의’와 ‘사회협정’을 도출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노총은 정부와 자본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대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친환경대체고용을 요구하고, 이에 수반되는 보상, 교육, 재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제조업 중심의 고용과 성장구조를 그린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유도방법, 전문인력 육성, 기술개발, 촉진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노동조합은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

또한,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동시에 다룰 수 있는 방안으로서 녹색경제와 녹색일자리가 주목받고 있다. 이런 관심은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화, 환경오염방지, 생태계 복원 등의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 및 기타 환경적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논리에 입각한 것이다.

이에 반해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이라는 이름 아래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하겠다며 대표사업으로 4대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름다운 우리 금수강산에 대한 무분별한 파괴는 물론 정작 자신들이 표방한 일자리 창출에도 전혀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적어도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는 ▲‘환경관리자 의무고용제’ 부활, ▲재생에너지 일자리,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 효율화사업을 통한 일자리, ▲사회적 기업을 통한 녹색일 자리를 확보할 경우 기후변화관련 분야에서 15만 4천개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

이렇듯 기업과 국가 그리고 국제사회가 특단의 대책을 내리지 않은 채 지금 속도로 진행될 경우 환경파괴로 인하여 회색의 미래를 금세기내 맞이할 수밖에 없다. 노동조합운동은 녹색 미래사회를 위하여 전환을 위한 노동의 총체적 전략을 수립하고, 현장을 조직하며, 시민사회, 환경과 연대해야 한다.

2) 노동체제 개혁목표

(1) 안정된 노동시장

우리 노동시장은 지난 10년간 두 차례의 경제위기를 관통하면서 정부가 유연성을 만병통치처럼 사용한 나머지 이중화, 양극화의 분절구조가 심화되었다. 기본적으로 고용형태(정규직과 비정규직), 기업규모(대기업과 중소기업), 성별의 3개 단층선에 의해 구조화되었다. 이에 따라 대기업 남성 정규직 근로자집단으로 구성되는 핵심부문과 여타의 주변부문은 임금소득, 기업복지, 교육훈련, 사회보험 수혜, 법정 근로기준 보호, 그리고 노동조합의 이익대변 등에 있어 상당한 격차와 거리를 두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권은 노동정책을 성장정책의 하위개념으로 규정하여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내놓고 비즈니스프랜들리를 강조하면서 노동유연화정책을 쏟아내고 있어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사회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다. 성장을 위한 노동의 일방적 희생이 강요되어 우리 고용시장은 대단히 불안하고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

실제로 한국 노동시장에 대한 유연성을 추정한 결과 고용보호법제 경직성 지표는 OECD(2004년) 28개국 중 12위였으며, 노동시장, 고용, 임금의 장기 및 단기탄력성, 조정속도 등 9개 지표 중 8개가 미국보다도 높아 매우 유연한 편이었다. 또한, 1998년, 2009년 두 차례의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한국 경제는 외연상 안정세로 접어들고 성장을 구현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풀뿌리인 가계경제가 도산 위험상태에 이르고,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서민 및 노동자의 생활은 더욱 더 피폐해지고 있다. 전체 노동자 가운데 449만 명이 저임금계층³⁾으로 1년 동안 4%가 증가했고, 법정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사람은 200만 명을 육박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국형 안정성 모델을 고용시장 구조개혁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중장기 개혁프로그램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모해야 한다.

3) 중위 임금의 3분의 2미만으로 시간당 임금 5181원 미만

미래노동사회는 안정된 노동시장정책을 펼쳐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적정한 임금보상으로 소득과 소비 개선의 선순환구조를 만들고 국민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며,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추진되어 사회안전망 구축과 사회공공성 확보가 병행될 때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며,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2) 다층적 노사관계 및 노동법적 보호 강화

산업사회에 있어서 노사관계는 갈등 조정과 이해 대변을 위한 대화와 타협의 방식으로서 산업평화와 산업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노사관계는 매우 취약하다.

첫째, 노사관계의 기본원칙인 노사자율이 지켜지기보다는 90년대 중반까지는 노사관계가 법치의 영역에서 공권력이 노사관계에 직접 개입하는 양태를 취했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잠시 노사자치주의 확립과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이 제시되었지만 노동정책이 경제정책의 하위수단으로 전락하면서 실험에 머물고 말았다. 4년전 권위주의정권의 재등장으로 정부는 노사관계법제도를 개악했고,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노사관계에 직접 개입하는 무리수를 두었다.

둘째, 법제도 상으로 노사관계가 기업별체제로 설계되어 노사관계가 파편화, 분권화되어 있다. 이 때문에 목전의 이익을 추구하는 실리주의적 경향을 띠게 되고, 노동연대를 제약하며, 노동운동의 국민적 정통성과 도덕성이 취약해진다. 뿐만 아니라 기업단위로 분산된 노사관계 틀에서 수천 개의 교섭테이블이 만들어져 교섭비용을 증가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미래노동사회의 노사관계는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중층적 구조의 사회적 파트너십 형성, 자율과 책임의 노사자치주의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중앙단위 노사정위원회의 개편과 산업·업종단위 노사관계 구조 마련, 지역노사정협의체의 내실화가 추진되어야 하며, 기업별 노사관계를 점진적으로 산업단위로 전환하기 위한 노동계 자체 노력과 법제도의 개선이 필

요하다.

한편, 노동자를 보호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동법적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무분별한 정리해고와 정년이전 상시퇴직의 고용불안으로부터 적정한 보호와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 그리고 노동자의 이해와 권리를 대변하고 보호하는 노동조합의 법적 보호규제로서 완전한 노동3권을 보장하고, 노조설립 절차 개선, 단체협약 일방해지권 제한, 노동자성 및 사용자 개념 확장, 손배가압류 제한, 공격적 직장폐쇄 규제 등이 뒤따라야 한다.

(3) 보편적 복지

한국사회에서의 노동자를 비롯한 국민들의 삶은 교육, 주거, 노후, 의료 등 4대 불안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그동안 불안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방법은 개인적인 방법으로 필사적으로 사교육에 매달리고 능력되는 대로 민간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불안은 심화되어 왔다. 서민과 노동자 등 보통의 국민들은 사교육 경쟁에서 부자들과 고소득 전문직들을 이길 수 없다. 결국, 학벌과 일자리와 사회적 지위가 대물림되며, 더 이상 개천에서 용 나는 세상이 아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방법이 아니라 집단적인 방법으로 사회개혁을 통해서 복지의 보편화를 달성해야 한다. 산업과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누구나 봉착하게 되는 생애주기별 위험에 대한 사회적 대처방안을 보편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것이 유럽 선진국들이 이미 오래 전에 달성했고 환경의 변화에 조응하며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모습이다.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통해 거대한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보편적 복지’와 ‘복지국가’이다. 과거 수십 년 동안 ‘국가와 복지와 세금’에 대해 저항감을 키워오며 자유경쟁과 시장만능의 성장주의 신화에 사로잡혀 있던 국민들이 보편적 복지국가를 요구하며, 누구나 생애 전 과정에 걸쳐 기본소득과 사회서비스를 보장받는 ‘보편적 복지’가 제대로 제도화된다면 기꺼이 누진적 방식으로 세금을 더 내겠다고 한다. 70% 이상의 국민은 더 이상 미국식의 시장만능국가가 아니라 스웨덴식의 보편적 복지국가로 발전하길 원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경제사회의 현실, 즉 신자유주의 시장만능국가가 초래한 사회 양극화와 민생 불안이 반영된 결과이다. 따라서 미래노동사회의 중심축은 복지 국가에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복지와 노동의 결합을 통해서 노동조합운동이 복지를 선도하는 운동주체로 나서야 한다.

Ⅲ. 미래전략 100대 과제 및 17대(12+5) 핵심과제

1. 미래전략 100대 과제

한국노총은 노동이 존중받는 평등복지통일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사회개혁적 노조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100대 과제를 실현한다.

※ 각 분과별로 목표-의제-과제순으로 나열

▶ 노동시장 정책(8-22-26)

목표(8)	의제(22)	과제(26)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철폐	비정규직법 개선	- 기간제 사용사유제한으로 개선 - 간접고용 철폐 - 차별시정제도 강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확대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확대
	비정규직 보호수준 제고	- 사회보험 확대 및 사회보험료 면제
고용안정성 강화	취업자 고용안정성 강화	- 정리해고 요건 강화 - 고용불안기업 고용보험 부가보험료 제도 도입
	고용보험제도 개혁	- 실업부조 도입 -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목표(8)	의제(22)	과제(26)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 고용확대	-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창출	- 노동시간 규제강화
	중소기업 고용개선 및 대기업 고용책임성 강화	- 도급구조 개선
	친환경녹색일자리 창출	- 환경관리자 의무고용규정 개선
청년/고령/여성 고용활성화	청년고용확대	- 청년고용할당제 도입
	정년 연장	- 정년 60세 법제화
	여성고용활성화 및 질 제고	- 여성에 대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확대강화
고용거버넌스 활성화	고용서비스 강화	- 공공고용서비스 확대 강화
	직업훈련 활성화	- 노동조합의 직업능력개발사업 활성화
	기존고용거버넌스 기구 노사단체 참여 및 권한 확대	- 고용정책심의위원회, 고용보험위원회 노사 권한확대
양극화 해소	생계비 임금과 숙련급 임금 조화	- 산별 숙련급 체계 구축
	연대기금 설립	- 사내근로복지기금 확대
저임금 해소	최저임금 현실화	- 최저임금제도 개선 및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생활임금 확보	- 생활임금 조례 제정
	취약계층 보호	- EITC 강화
저임금-장시간 노동구조 개선	실노동시간 단축	- 초과노동시간 제한 및 교대제 개선
	임금안정성 강화	- 시일급제의 월급제 전환

▶ 복지정책(2-12-33)

목표(8)	의제(12)	과제(33)
사회임금 30% 확보 - 5대 가계생계비 (의료, 보육, 교육, 노후, 주거비) 절감	건강보험 보장수준 확대	- 의료비 상한 100만원 및 비급여 항목 급여화 - 공공보건의료 확충 - 아동 및 노인 주치의제 실시 - 상병수당,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급여화
	건강보험 재정개혁	-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지원 확대 - 건강보험 수입, 지출구조의 개혁 - 민간보험 규제 강화
	임신·출산지원	- 임신부터 출산까지 검사 및 출산비용 전액 지원 -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및 급여 현실화 - 배우자 출산휴가 개선 및 파파쿼터제 도입
	양육 지원	-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단계적 무상 보·교육 -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및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 방과 후 학교 활성화
	공교육의 제자리 찾기	- 무상의무교육 확대 및 공교육 재정 GDP 7% - 교원당 학생수 15명 및 학급당 학생수 20명 - 직업교육 특성화 고등학교 활성화
	고등교육체계 정비	- 대학의 기능별 재편 및 장학금 80% 지급 - 사립학교법 전면개정을 통한 대학교육 정상화 - 대학 등록금·생활비 장기저리융자 및 취업후 장기상환제 도입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60% 확보	- 기초노령연금 수급액 2배 인상 - 기초노령연금+국민연금 소득대체율 60% 확보
	노동자 퇴직연금 수급권 확보	- 근로복지공단의 사업대상 확대 - 기업규모별 퇴직연금 부담금 지원
부담가능한 주택의 공급확대	- 공공임대주택 20% 확보 및 민간계약 임대주택 도입 - 공공분양주택 분양가격 안정화 및 저렴 주택	

목표(8)	의제(12)	과제(33)
		<p>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주택 등록제 시행
	세입자 주거안정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료의 공공관리와 임대료 상승률의 제한 -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부여 - 전세금 보증센터 설치
평생돌봄서비스 구축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공공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서비스 전달체계 공공화를 위한 사회 서비스센터 설립
	생애주기별 돌봄 서비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교사, 아이·노인돌보미·장애인활동보조인 등 돌봄영역 확대 - 사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돌봄노동자 직접 고용 - 돌봄노동자에 대한 법·제도적 보호방안 마련

▶ 조직 강화(4-8-25)

목표(4)		의제(8)	과제(25)
조직 혁신	조직운영의 민주성, 자주성 강화	조직운영 집행체계 재정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원선출제도 및 의사결정기구 현장참여 확대 - 현장소환제도, 정책감사(사업감사) 도입 - 각급 조직 의사결정기구(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에 현장 참여의 폭 확대
		재정자립 및 운영의 투명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자립 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및 의무금 부과 체계 개선 및 적정한 인상 방안 모색 - 정부보조금에 대한 원칙 정립
조직 확대	100만 조합원 복원 및 흔들림없는 제1노총	노동기본권 확보 위한 법제도 개선 투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임자 임금 노사자율, 복수노조 자율교섭 보장, 노동자성 및 사용자성 확대 등 노조법 전면개정 투쟁
		조직사업장내 조직률 70%이상 달성과 100만 조합원 복원을 위한 조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연맹-산별-지역 조직에 상설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및 조직 확대 사업 전개 - 총연맹, 지역본부 간 유기적 운영 및 간부역량 강화 프로그램 실시 - 조직 확대 캠페인 정기적 실시 및 조직활동가 양성프로그램 운영 - 조직 확대를 위한 규약 및 단체협약 개정 - 1지역본부 1일반노조 활성화 - 여성, 비정규직 및 특수고용노동자, 이주노동자 등 취약계층 조직사업전개 - 청년노동자 조직화(담당부서 및 위원회 설치, 할당제 도입, 조직문화 개선 등) - 준조합원제도(유니언 서포터즈) 도입
조직 강화	산별노조 건설 및 조직경쟁력 강화	유사산별 통합 및 산별노조 토대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산별 통합 의제화 및 공동사업, 공동투쟁 전개 - 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조직적 결의와 실천 - 투쟁사업장 공동지원, 공동임·단투지침 발간 - 5개 대산별 체계 구축
		조직경쟁력 강화, 노조 서비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위노조 경쟁력 강화(조직의 민주적 운영, 대표성 확보, 임원선출 제도 개선 등) - 새로운 서비스 모델발굴 - 지역사회 개입력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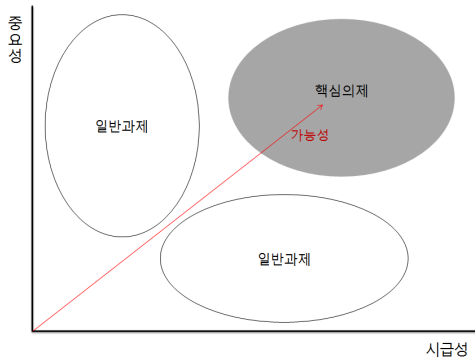
목표(4)		의제(8)	과제(25)
연대와 단결	노동운동진영의 단결, 연대, 통일	조직분쟁의 조정	- 노총내 TF팀 조직하여 조직분쟁 조정 규정 마련 - 총연맹-산별-지역 등 중층적 조정기구 운영
		노동운동진영의 연대와 통일	- 양대 노총 공동투쟁과 공조 강화 - 1국가 1노총 건설

▶ 연대 확대(3-6-16)

목표(4)		의제(8)	과제(25)
사회연대		‘노동’이 중심되는 연대 강화	- 노동 관련 단체와의 일상적 연대 강화 - 노동의제를 중심으로 한 연대활동 강화
		사회개혁 전선 형성에 개입	- 노동이 주도하는 범민중진영 단일 상설 연대체 건설 -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한 이슈별 시민사회 연대활동 전개 - 남북노동자 교류 확대 등 통일사업 활성화
		소외된 이웃에 대한 나눔	- 취약계층 보호 연대 강화 - 나눔사업의 재정립 및 활성화
정치연대		친노동, 민주진보 정당과의 정책연대 강화	- 반노동적 정치세력과 단결 및 심판 - 연대정당과의 정책협의체 정례화 및 공식화 - 공직후보 선출시 노조의 영향력 확대 - 사회적 합의기구 개편
국제연대		아태지역 노동운동의 주도세력으로 성장	- 정기교류 아시아국가의 범위 확대 및 내실화 - ILO, ITUC 아태지부 노조간부 교육 강화 - 공적자금지원(ODA)의 노동단체 배분 확대
		광범위한 국제연대 확대, 강화	- 대안세계화운동 국제주의 네트워크 확대 - 국제 노동기본권 및 인권 보장 활동 강화

2. 미래전략 17대(12+5) 핵심과제

한국노총은 100대 과제 실현을 더욱 구체화하기 위하여 내용의 중요성, 시기적 시급성과 실현가능성을 기준으로 12+5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였다.



(1) 노동시장 구조개혁

- | | | |
|---|-----------------------|------------------------------|
| ① |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철폐 | 비정규직의 최소화와 차별철폐를 위한 비정규직법 개정 |
| ② | 취업자 고용안정 강화 | 정리해고 남용규제, 고용불안기업에 패널티 |
| ③ | 실업안전망 확충 | 청년·장기실업자 등 실업부조 도입, 고용보험 개혁 |
| ④ | 양극화 해소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외화, 연대기금 설립 |
| ⑤ | 저임금 해소 | 공공조달 및 공공위탁과 연계한 생활임금 조례 제정 |
| ⑥ | 장시간 노동구조 개선 | 2020년까지 1800시간대로 노동시간 단축 |

(2) 보편적 복지실현

- | | | |
|---|---------------------|------------------------|
| ⑦ | 건강보험 보장수준 확대 | 상병수당 신설, 건강보험 급여화 |
| ⑧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 우리동네 최소 2개 국공립어린이집 만들기 |
| ⑨ | 교육비 부담 완화 | 모든 대학생에게 조건없는 반값등록금 |
| ⑩ | 노후생활 보장 |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연금 지급 |

(3) 노동친화적 법제도환경 조성	
①	노조법 개정 전임자임금 노사자율, 복수노조 자율교섭 보장 등
②	사회적 대화체계 개선 노사정위원회 개편, 중층적 사회적 대화체계 마련
(4) 조직강화	
①	유사산별 통합, 산별노조 토대구축 2015년 19개 중산별 2020년 5개 대산별 건설
②	조직화 외연 확대 청년, 이주노동자, 은퇴노동자 등 준조합원 가입
③	조직운영의 민주성 및 자주성강화 현장참여 확대 위한 조직 집행체계 정비
(5) 연대 강화	
④	1국가 1노총 노동자의 하나된 단결을 위한 양대노총 공조
⑤	사회연대 강화 민주시민단체 및 개혁진보진영과 연대 강화

3. 노동-복지 12대 핵심과제

1) 노동시장 구조개혁

(1)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철폐 : 비정규직의 최소화와 차별철폐를 위한 비정규직법 개정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과제는 과도한 비정규직 규모를 축소하고 차별을 철폐하는 것이다. 비정규직을 사회적으로 최소화하고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의 남용을 규제하고 차별시정제도를 강화하는 법제도의 개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비정규직법 개정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현행 기간제법의 제한요건을 사용사유제한 방식으로 전환한다.

- 사용사유제한을 명시하고 예외적 경우(예를 들어 △수출 물량이 갑자기

늘 때 △계절적 요인이 있는 직종 △대체인력이 갑자기 필요한 경우 △ 전문적인 기술 영역의 업무인 경우 △기타 기간제를 써야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노조 또는 노동자대표와의 분명한 합의가 있을 경우 등)에 국 한해 비정규직 사용을 허용하도록 한다.

- 전면적인 사용사유제한에 대한 입법화가 지연될 경우 공공부문대기업에 우선 적용토록 한다.

② 간접고용을 철폐한다.

- ‘당해 사업(장)의 상시업무에 대한 직접고용 원칙’과 ‘도급, 용역, 위탁 등에 의한 간접고용의 원칙적 금지 규정’을 근로기준법에 포함한다.
- 파견법 폐지 및 직업안정법상 관련 규정을 삭제한다.

③ 단시간 근로를 보호한다.

- 통상근로자 채용 시 단시간근로자 우선채용 의무를 부여한다.
- 통상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청구 시 경영상 이유가 없는 한 전환 의무를 부여한다.

④ 차별시정제도를 강화한다.

-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 기준법에 규정한다.
- 시정신청권을 노동조합 및 무기계약 또는 직접고용 간주 노동자에게 까 지 확대하고 제척기간을 연장한다.

(2) 취업자 고용안정 강화 : 정리해고 남용규제, 고용불안기업에 패널티 부과
근로기준법 24조의 정리해고 요건에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와 함께 ‘노동조 합 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포함하여 노동자의 집단적 해고의 악용을 방지 하고 사용자의 경영상 잘못으로 인한 정리해고를 강력히 규제한다.

비자발적 퇴직과 비정규직 남용은 고용보험의 지출을 증가시키므로, 일정기간 동안 반복적인 정년 이전 상시 퇴출 사업장, 동종업종과 비교해서 비정규직 비 중이 높은 사업장은 고용보험료의 사용자부담분에 패널티를 부과한다.

(3) 실업안전망 확충 : 청년·장기실업자등 실업부조 도입

청년실업자, 장기실업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 중 본인·배우자 또는 부모의 소득재산 기준으로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최저임금의 90%수준에서 6개월간 실업부조를 지급한다.

(4) 양극화 해소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외화, 연대기금 설립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상을 비정규직, 파견직, 하청기업 노동자로 확대하여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동등한 복지혜택을 누리도록 하며, 장기적으로는 영세중소기업이나 협력업체 노동자까지 포괄할 수 있는 초기업적 연대기금을 조성한다. 연대기금은 지역별, 업종별로 복수의 사업자가 기금을 출연하고 여기에 노동과 정부가 일정정도의 재원을 부담한다.

(5) 저임금 해소 : 공공조달 및 공공위탁과 연계한 생활임금 조례 제정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조달이나 민간위탁 사업 시 생활임금을 주는 업체에게만 입찰 자격을 부여하도록 조례를 개정한다. 생활임금은 각 지역 노사정협의체에서 법정최저임금 이상 수준으로 매년 책정하도록 한다.

(6) 장시간 노동구조 개선 : 2020년까지 노동시간을 1800시간대로 단축

근로기준법 제53조를 개정하여 휴일특근을 초과노동시간(주 한도 12시간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되, 시행 시기는 사업장 규모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제도 시행 후 근로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감독관을 충원하고 명예근로감독관제도를 도입한다.

장시간근무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2조2교대 사업장부터 교대제 개선작업에 착수하며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실행한다. 또한 교대제 전환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용인원을 유지하는 경우 지원을 확대한다.

한국노총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휴가제도의 도입 및 사용 촉진의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안식휴가, 능력개발휴가, 목적별 휴가, 건강휴가, 생일휴가, 대체휴일제 도입 등으로 휴가사용을 촉진한다.

2) 보편적 복지실현

(1) 건강보험 보장수준 확대 : 상병수당 신설 및 건강보험 급여화

투병기간 동안 일정액의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 ‘상병수당’을 신설하여 중병으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한다. 노동자가 질병에 걸렸을 때 생계에 대한 걱정보다는 치료에 집중하여 회복할 수 있도록 질병으로 인한 해고금지(3개월) 및 유급휴직을 법제화한다. 3개월 후에는 건강보험으로 상병수당을 6개월(최장 1년)간 보장한다.

(2)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 우리동네 최소 2개 국공립어린이집 만들기

현재 11% 수준 국공립 보육시설을 아동수 대비 50%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지역 간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읍면동 단위에 최소한 2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한다. 특히, 농산어촌뿐만 아니라 공단, 인구밀집지역에 집중 설치하며 영아전담 국공립 어린이집을 더욱 확대한다.

(3) 공교육 제자리 찾기 : 모든 대학생에게 조건없는 반값등록금

일반 노동자 가정이 부담가능한 수준으로 등록금을 인하하기 위해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여 연간 등록금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수준에서 ‘등록금 기준액과 허용 범위’를 정하고 이 범위 안에서 각 대학들이 등록금을 책정하도록 규제한다.

(4) 노후생활 보장 :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연금 지급

노후 생활안정을 위해 향후 3년 이내에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율을 평균소득월액(A값)의 5%에서 10% 수준으로 인상한다. 목표를 세우고 세부적인 재정 및 행정계획을 면밀히 세워야 하며, 그 전에 2008년 기초노령연금 시행 후 반영되지 못한 3년치 인상분(평균소득월액의 0.75%)를 즉각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3) 노동친화적 법제도환경 조성

(1) 노조법 전면개정 : 전임자임금 노사자율, 복수노조 자율교섭 보장 등

△타임오프 폐지 및 전임자 임금지급 노사자율, △복수노조 도입에 따른 자율

교섭 보장, △노조설립 절차 개선 (노동자 정의규정, 행정관청 시정요구권, 심사 재량권), △단체협약 일방해지권 제한, △사용자 개념 확장 관련 노조법을 전면 개정한다.

또한, △노조활동에 대한 손배가압류 제한, △산별교섭 법제화, △필수유지업무 폐지 및 최소유지업무 신설 △공격적 직장폐쇄 규제에 대한 각 정당의 당론화를 요구한다.

(2) 사회적 대화체계 개선 : 노사정위원회 개편, 중층적 사회적 대화체계 마련
노사정위원회의 대표성과 독립성 강화, 참여범위 확대, 구속력 및 집행력 강화, 경제사회부문까지 의제 확장을 위하여 노동계와의 일체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 하에서의 노사정위원회를 탈퇴, 해체를 요구한다. 노사정위원회 개편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며, 2012년 4월 총선직후 19대 국회 구성원들과 사회적대타협을 추진한다. 또한, 19대 국회가 개원하는 6월 임시국회에서 원 구성 직후 노사정위원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 이외는 별개로 지자체장, 지방의회에 지역노사민정협의체 내실화를 위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2012년 상반기내 조례개정을 완료한다.

4. 조직-연대 5대 핵심 과제

1) 조직 강화

(1) 유사산별 통합 및 산별노조 토대구축

조직대상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산별끼리 단계적 통합함으로써 노동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조직, 인력, 재정을 집중한다. 이를 위해 유사산별간 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조직통합에 대한 결의기구의 결의를 득한 후 공동사무실 운영 등으로 고정비용을 줄이고, 투쟁사업장 공동지원, 공동임·단투지침서 발간 등을 통한 공동사업을 전개하며 조직간 동질성을 회복하여 조직적 통합으로 이어지는 단계를 밟도록 한다. 장기적적으로 5개 대산별(제조, 교통물류, 금융보험,

개인서비스, 공공서비스) 건설을 목표로 실시한다.

(2) 조직화 외연 확대 - 청년, 이주노동자, 은퇴노동자 등 준조합원 가입

준조합원 제도를 도입하여 조직확대 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그릇을 넓히고자 한다. 준조합원이 되면 노총의 법률자문 및 상담, 각종 교육을 이용할 수 있고 정보를 공유한다. 준조합원은 노조를 결성하기 어렵고 노조가입이 제한되어 있거나 용이하지 않은 청년, 이주노동자 등이 주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은퇴 고령 노동자 및 직능단체와도 교류와 협력을 모색하면서 단계적으로 조직한다.

중앙과 지역차원에서 현실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실업, 일자리, 연금문제, 법률 지원 등 직접적인 관심과 지원을 필요로 하는 내용들에 정책을 제시하고 사회적 의제화하도록 한다.

(3) 조직운영의 민주성 및 자주성강화

노동운동에 대한 불신, 관료화, 권력화를 견제하고 복수노조 시대 조직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조직운영에 있어서 민주성과 자주성을 구현해야 한다. 한국노총은 과거 조직혁신을 위한 다양한 시도와 노력들을 계승하여 현장의 참여를 확대하고 노동운동의 진정한 자립을 위해 선거인단 기준완화, 현장소환제 도입, 조직 의무금 부과 체계 개선 및 적절한 인상 등을 추진한다.

3) 연대강화

(1) 1국가 1노총 - 노동자의 하나 된 단결을 위한 양대 노총 공조

당면한 노조법 개정 투쟁부터 양대 노총의 공동투쟁을 활성화하면서 소모적 조직경쟁을 자제하고 반제3노총 전선을 구축한다. 또한 노동 관련 단체와의 지속적인 연대로 노동자의 통 큰 단결을 실현할 1국가 1노총 체계를 실현한다. 장기적으로 큰 덩어리의 노동자 전선을 형성하여 노동이 존중되는 평등복지통일국가를 이끌어 나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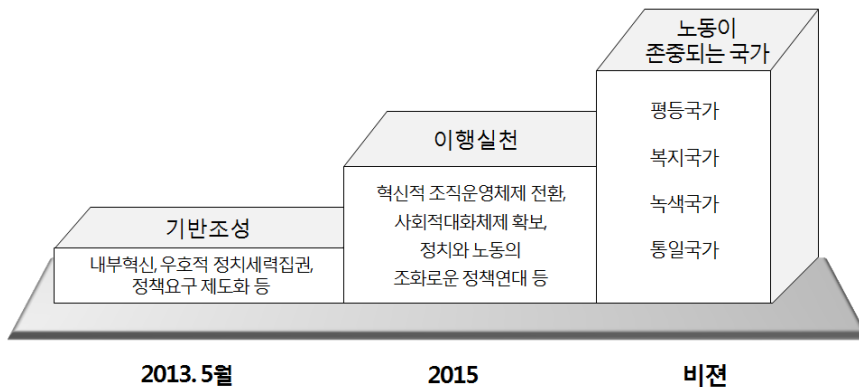
(2) 사회연대 강화 - 민주시민단체 및 개혁진보진영과 연대 강화

사회연대는 노동조합 내부적 단결을 노동자 계급 전체와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

로 확장하는 운동방식이다. 노동조합의 조직된 힘을 동원하여 시민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면서 단일한 상설연대체 건설을 주도 한다. 또한 사회개혁적 노동주의의 운동 원칙을 확고히 세우면서 진보진영에서의 한국노총의 위상을 강화한다.

5. 시기분류

한국노총은 미래노동사회의 상(象)인 “노동이 존중되는 평등복지통일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미래전략 100대 과제와 노동-복지 12대 핵심과제, 조직-연대 5대 핵심과제를 전조직적 역량을 집중시켜 추진해 나간다.



미래전략의 수행은 단기적으로 그 결과가 드러나기 어려운 조건이 있다. 이에 시기별로 3단계로 구분하여, 1단계는 차기 정권 출범 직후로 2013년 5월까지로 상정한다. 다음으로 2단계는 2015년까지로 차기국회 즉 19대 국회까지로 차기 정권의 임기 4년차까지이다. 3단계는 장기비전으로 평등, 복지, 녹색, 통일 국가를 완료하는 시기로 정한다.

이에 1단계인 2013년 5월(차기 정권 출범때)까지는 미래전략 가운데 노동-복지 12대 핵심과제, 조직-연대 핵심5대과제인 12+5 핵심과제를 가시적 성과물로 만들어낸다. 또한, 이 시기까지 전단위 조직별로 내부혁신을, 정치적으로는 노동

에 우호적이고 민주진보적 가치를 지향하는 정치세력의 집권을, 핵심과제에 대해서는 정책을 요구하여 제도화를 달성토록 한다.

2단계로 2015년(차기 19대 국회입기내, 차기정권의 임기 4년차)까지는 일반 의제에 대한 이행실천을 제기, 관찰시켜나가고, 이를 꾸준히 이어나가기 위한 제도적, 조직적 구조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서 미래전략의 비전을 이행할 장치를 마련하고, 소위 “노동이 존중되는 평등복지통일국가”를 장기 비전으로 실천해 나간다.

6. 실현방안

본 미래전략은 노동, 복지, 노사관계, 노동조합 조직과 운영, 사회연대 영역으로 국한되어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정치, 경제 영역에 있어서는 현상과 문제점을 열거하는 수준으로 정리되었고, 의제화 되어 있지 않은 한계가 있다. 이에 미래전략의 실현방안은 노동, 복지, 노사관계, 노동조합 조직과 운영, 사회연대 영역에 대해서 시스템과 의식 및 관행의 혁신, 노사관행 제도 개선, 노동시장정책 개선으로 정리하였다.

1) 시스템과 의식 및 관행의 혁신

노동조합의 내부혁신은 미래노동사회 비전의 필요충분조건이다. 사회변화 발전을 지향하고, 이에 앞장서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운동이 뼈를 깎는 자기반성과 끊임없는 혁신으로 무장해야 하고, 경제적 이익에 앞서 정치사회적 지위를 향상하고, 사회부조리를 혁파하기 위한 사회개혁에 앞장서야 한다.

따라서 한국노총은 노동조합 조직 운영의 민주성과 자주성 강화를 목표로 조직운영 집행체계를 재정비, 강화하고, 재정자립 및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의제로 선거인제도 확대, 정책감사(사업감사)제 도입, 각급조직의 의사결정기구의 현장 참여 확대, 의무금 부과체제 개선 및 적정한 인상, 정부보조금에 대한 원칙 정립, 단위노조의 조합가입 범위 확대, 임단협 총회인준, 임원선출 직선제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간다.

2) 노사관계 제도 개선

미래노동사회에서 노사관계는 자본주의체계를 작동하는 중요한 사회적 기제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노사관계는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중층적 구조의 사회적 파트너십 형성, 자율과 책임의 노사자치주의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이에 한국노총은 중앙단위 노사정위원회의 개편과 산업·업종단위 노사관계 구조 마련, 지역노사정협의체의 내실화를 추진하고, 기업별 노사관계를 점진적으로 산업단위로 전환하기 위한 노동계 자체 노력과 법제도의 개선을 경주하고자 한다.

또한, 노동자를 보호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동법적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무분별한 정리해고와 정년이전 상시퇴직의 고용불안으로부터 적절한 보호와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

그리고 노동자의 이해와 권리를 대변하고 보호하는 노동조합의 법적 보호규제로서 완전한 노동3권을 보장, 노조설립 절차 개선, 단체협약 일방해지권 제한, 노동자성 및 사용자 개념 확장, 손배가압류 제한, 공격적 직장폐쇄 규제 등을 단기적 핵심과제로 추진한다.

3) 노동시장정책 개선

시장만능주의 신자유주의정책에 따라 경쟁력과 효율성이 지나치게 강조된 나머지 유연화, 규제완화가 만병통치 약처럼 남발되어 이중 노동시장이 형성되고, 소득과 고용의 양극화와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미래노동사회에서의 평등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유시장경제모델을 조정경제모델로 전환하고, 노동시장 기본정책의 방향을 유연성 확대에서 안정성으로 바꾸어야 하며, 사회안정망을 강화해야 한다.

IV. 17대(12+5) 핵심과제의 실행계획

앞 장에서 정리된 많은 일반과제들 중에서 시급성, 중요성 그리고 실현가능성을 기준으로 고용, 임금, 복지부문에서의 12대 정책과제와 조직운영에서의 4대 조직과제 등 모두 17개의 핵심과제를 선정하였다.

이들 17대 핵심과제는 계획과 실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시기별로 단기((2012년-2013년), 중기(2014년-2015년), 장기(2016년-2020년)로 구분되었고, 실천수단으로는 동원(현장의 힘), 연대(여럿이 함께), 참여(정책제도개선)로 구분되어 로드맵 형태로 제시되었다.

1. 12대 노동-복지 과제

1) 고용부문 정책과제

(1) 핵심과제

사회안전망이 빈약한 상태에서 기업구조조정이 상시화되어 고용불안 정도가 높아졌고,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의 확산과 차별이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기에 취업자의 고용안정 강화와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철폐를 고용분야의 핵심과제로 선정하였다. 또한 고령화시대 필수조건인 정년연장을 나머지 핵심과제로 선정하였다.

첫째. 취업자 고용안정 강화	둘째.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철폐	셋째. 정년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리해고 규제강화 고용불안 기업 고용보험 패널티 제도 도입 사업양도시 고용승계 보장 고용안정위원회 설치 및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정규직법 재개정 (사용사유 제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확대 비정규직 보호수준 제고 (차별시정제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년 60세 법제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도입 장기적으로 정년 폐지

첫째. 취업자 고용안정 강화	둘째.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철폐	셋째. 정년연장
고용안정협약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 단시간노동자 보호 	

(2) 실행계획

시기	수 단	실행계획
단기 (2012년-2013년)	동 원 (현장의 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정규직 감축 및 고용안정쟁취 공동임단투 전개 - 고용안정협약(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차별해소, 정리해고 규제, 정년연장 포함) 체결 추진
	연 대 (여럿이 함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시장개혁 핵심과제 시민사회, 정치권내 공론화 → 총선 핵심의제로 제기 → 총선후 법제화 본격 추진 → 총선이후 실행되지 않을시 대신 의제로 제기 • 비정규직법 재개정, 정리해고 규제강화 양노총 공동행동 - 양노총 주최 토론회 및 공동투쟁(2011년하반기-2012년) • 정년연장에 대한 청년여성단체 및 언론, 학계 등 사회적 지지 확대 (간담회, 토론회, 언론기사화 등)
	참 여 (정책제도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시장개혁 핵심과제 대정부·지자체 요구(사회적대화기구, 정부위원회 등에 적극 제기)
중기 (2014년-2015년)	동 원 (현장의 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시장 구조개혁 전면행동 - 고용안정협약 체결을 위한 전국사업장 동시교섭 -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철폐, 정리해고규제강화를 위한 전조직 캠페인/투쟁 전개 - (비정규직법 개정이 이뤄지지 못한 경우) 전면적 개정운동 전개
	연 대 (여럿이 함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철폐, 정리해고 규제강화를 위한 양노총-시민사회 공동행동 강화
	참 여 (정책제도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기정권의 노동시장 개혁과제 이행 감시 및 촉구 • 비정규감축고용안정을 위한 사회적 대화 및 협약 체결

2) 임금부문 정책과제

(1) 핵심과제

노동자간 임금, 노동조건, 기업복지의 불평등이 갈수록 확대되어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기에 연대임금 설립, 생활임금 운동 전개를 임금분야의 핵심과제로 선정하였다.

아울러 OECD 회원국 국민 중 최장시간을 일하면서도 저임금에 시달리는 다수 노동자들의 삶의 질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실노동시간 단축을 또 다른 핵심과제로 선정하였다.

넷째. 연대기금 설립	다섯째. 생활임금 운동(조례제정)	여섯째. 실노동시간 단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내하청, 비정규직에게 확대 활용 •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연합형 기금 설립 근거 마련) • 중소기업, 협력업체 노동자까지 포괄할 수 있는 지역별, 업종별, 산업별 연대기금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공공조달, 민간위탁 사업시 생활임금 도입 조례 제정 • 수도권 지자체 조례제정 확대 전개 • 민간(사기업, 비영리기관 등)으로의 확대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과노동시간 제한에 휴일 특근 포함 • 다양한 휴대제 도입 •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 농수산업, 감시단속노동자 근로시간, 휴게규정 적용 • 5인미만 사업장 주40시간제 적용

(2) 실행계획

시기	수 단	실행계획
단기 (2011-2013)	동 원 (현장의 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교섭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내하청, 비정규직노동자로의 확대 요구 • 실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관련 단체협상 요구
	연 대 (여럿이 함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임금 조례제정 요구 캠페인 실시: 최저임금연대 결합 제안 • 장시간노동 관행 개선 사회적 여론화 작업
	참 여 (정책제도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생활임금 조례제정 요구 • 근기법 개정을 통한 연장근로 상한선 단축 및 근로시간 특례

시기	수 단	실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종 축소 실노동시간 단축 관련 각종 정부지원 확대 요구
중장기 (2013-2020)	동 원 (현장의 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임금 조례 모범사례 발굴 및 모델 마련을 위한 지역TF 구성 : 단협요구안 마련 실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관련 단체협상 요구
	연 대 (여럿이 함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대기금의 대국민 이슈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사회단체와 연대기구 구성 - 공동 공청회 개최 및 캠페인 실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손실임금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 보전 관련 사회적 합의 요구 등 여론화
	참 여 (정책제도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복지기본법 개정하여 연합형기금 설립 근거 마련(입법발의 의원 모색) 연대기금 논의를 위한 노사정위 의제별 위원회 설치 요구 지자체 생활임금 조례제정 수도권 지자체로 확대 요구

3) 복지부문 정책과제

(1) 핵심과제

의료, 보육, 교육, 노후 등 4개 영역은 노동자들이 안정된 직장과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분야이다. 이에 질병으로 인한 해고·실업·가계파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상병수당 신설,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비싼 등록금 때문에 허리가 휘는 노동자들의 부담 경감을 위한 반값등록금 실시, 최소한의 노후 보장을 요구하는 20만원 연금 지급을 핵심과제로 선정하였다.

일곱째. 상병수당 신설 및 건강보험 급여화	여덟째. 우리 동네 최소 2개 국공립어린이집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질병으로 인한 해고금지 (3개월) 및 유급 휴직 법제화 3개월 후 건강보험에서 의료비와 생활비 보장(6개월~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약지구 및 인구밀집 지역에 우선 설치 영아전담 및 야간보육 어린이집 확대 맞벌이 가구 우선 입소정책 실시

<p>아홉째. 전체 대학생에조건없는 반값등록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자 월평균 소득 수준에서 ‘등록금 기준액과 허용 범위’를 규제 • 등록금 및 생활비 장기저리융자 및 취업 후 장기 상환제 도입 	<p>열번째. 전체 노인에게 20만원씩 연금지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노령연금 시행 후 반영되지 못한 3년 치 즉각 인상 • 향후 3년 이내에 평균소득월액(A값)의 5%에서 10% 수준으로 인상
--	--

(2) 실행계획

시기	수 단	실행계획
단기 (2012년-2013년)	동 원 (현장의 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 관련 산하 조직 및 보건 의료 전문가와 TF팀 구성, 병·의원의 공공성 확보 위한 의제개발 • 지자체별 조합원 대상 보육 수요조사, 산업단지 밀집지역 공동 직장보육시설 계획 검토 • 지자체 보육, 복지관련 조례 재개정 투쟁 • 시범 지역 선정하여 지역본부의 보육 관련 지자체 개입방안 마련 • 질병으로 인한 ‘3개월 유급휴직 + 6개월 무급휴직(건강보험에서 수당지급)’ 단협 요구 • 기업내 노후준비 교육 및 은퇴교육 실시 단협 요구
	연 대 (여럿이 함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노동은퇴자조합 서명운동 및 선언대회 개최 • 무상의료국민연대(가) 활동을 통해 상병수당 등 도입 촉구 연대강화 • 대학생 조직과 지속적으로 연대관계 유지하면서 노동조합 임단투와 연계 • 기초노령인상 운동본부 연대체 참여 및 노인단체와의 연대 모색 • 지역본(지)부의 경우 지역별 연대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함께 이슈개발과 요구안 관철
	참 여 (정책제도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정책심의회위원회에 상병수당의 건강보험 보장성 항목 포함 의견 개진 및 관철 • 건강보험 보장성 및 국고지원 확대를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 추진 • 기초연금 현실화 및 국민연금 일원화 논의를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 요구 • 노동자 임금수준에 맞는 교육비 지표 개발 및 발표(이슈화)

시기	수 단	실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원의 근무형태 및 시간대에 따른 운영시스템 연구
중장기 (2014년-2020년)	동 원 (현장의 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노총 평등복지위원회(가) 건설 • 사회임금 투쟁 위한 조합원 교육 및 홍보 정례화, 상설화 • 사안별 토론회 및 캠페인 배치 • 지속적인 단체교섭 요구
	연 대 (여럿이 함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본(지)부의 경우 지역별 연대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함께 이슈개발과 요구안 관철
	참 여 (정책제도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전략의 지속적인 점검 및 확대 전략 추진

4) 노동친화적 환경조성 과제

(1) 핵심과제

노조전임자 수를 대폭 축소시켜 노동운동을 위축시키는 타임오프제도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 중 하나인 단체교섭권을 제약하는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는 현시기 한국노동운동을 옥죄고 있다. 이에 노조법 전면재개정을 핵심과제로 선정하였고, 아울러 현 정부의 권위주의적 통치로 인해 소통이 실종되고 사회적 대화가 들러리 수준으로 전략하였기에 사회적 대화체계 개선도 핵심과제로 선정하였다.

열한번째. 노조법 전면재개정	열두번째. 사회적 대화체계 개선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타임오프 폐지 및 전임자 임금지급 노사 자율 ② 복수노조 도입에 따른 자율교섭 보장 ③ 노조설립 절차 개선 (노동자 정의규정, 행정관청 시정요구권, 심사재량권) ④ 단체협약 일방해지권 제한 ⑤ 사용자 개념 확장 ⑥ 노조활동에 대한 손배가압류 제한 ⑦ 산별교섭 법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사정위원회의 대표성과 독립성 강화, 참여범위 확대, 구속력 및 집행력 강화, 경제사회부문까지 의제 확장 ○ 지역노사민정, 산별·업종별 노사정위원회 법제화

열한번째. 노조법 전면재개정	열두번째. 사회적 대화체계 개선
8 필수유지업무 폐지 및 최소유지업무 신설 9 공격적 직장폐쇄 규제	

(2) 실행계획

시기	수 단	실행계획
단기 (2011-2013)	동 원 (현장의 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월초 산별 및 지역순회 → 11/3 임시대의원대회 → 11/26 전국노동자대회, 12월 전국 단위노조대표자대회(12월 임시국회에 대응한 노조법 개정 촉구투쟁) • 기존 정치 및 연대활동 평가와 2012년 정치 및 사회연대 활동 방향 수립 국감(8,9,10월) → 국회 예산대응 → 총대선 노동의제 이슈화 → 총대선 노동정책공약 반영 • 정치기획단 구성, 총선방침 수립(11/3 임시대의원대회)을 통한 대정치권 압박투쟁 • 복수노조 의식조사 및 ◦ 복수노조 양태, 교섭구조 등 노사관계 변화 분석(10~11월) • 국제정책세미나 (양대노총 공동주최, 국제비교를 통해본 노동 3권 침해실태와 노조법 개정 방향/ 12월초) • 2012년 임단투와 연계한 노조법 무력화 투쟁 전개 • 조직강화특별위원회 구성 (조직진단 및 점검지도, 복수노조 설립동향 분석, 조직혁신방안 마련, 미가입부문 및 미조직사업장 조직화, 중간전략사업장 조직화, 취약계층 조직화, 간부역량 강화 및 현장활동가 양성 등 / 2011. 8월) • 조직분쟁조정기구 설치 (복수노조에 따른 조직관할권 조정 / 2011. 10월) • 노사정위원회 탈퇴 및 해체 기자회견, 노사정위원회 개편방안 토론회 (2011.하) • 사회적대타협 추진 (경제위기 돌파, 고용 및 복지 확대, 녹색 전환 등 / 2012년 5,6월)
	연 대 (여럿이 함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사회단체 공동 토론회, 모의노동법정 등을 통한 사회 여론화 활동 (2011. 하반기~)
	참 여 (정책제도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법발의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⑤ : 야4당+양노총 노동대책회의를 통한 입법발의(5/18), ①,②부분반영 : 한나라당 의원 50명 입법발의(6/9) → ⑥~⑧

시기	수 단	실행계획
		<p>: 야4당+양노총 노동대책회의를 통한 추가 입법발의(정기국회 회기내) → ⑨ : 양노총, 야4당 입법발의 제안 (2011.하반기 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론화 및 국회상정 압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⑨ : 여야정당에 당론화 요구 (민주당은 ①,②를 당론화함) → 정치투쟁 및 조직투쟁을 통한 국회상정 압박 • 19대국회 상정 및 통과 <p>2012. 3,4월 : 총선 정치투쟁과 연계하여 노조법 개정에 동의 하는 정당(친노동자정당) 지원 → 2012. 6월 : 19대 국회 원구성 직후 노조법 국회 상정 및 통과</p> • 노사정위원회법 개정 입법추진 <p>입법안 마련(2011년 하반기내) → 노동에 우호적인 정당을 통한 입법발의 → 19대 국회 원구성 직후 법안 상정 및 통과</p> • 지역노사민정협의체 내실화를 위한 조례 개정 추진 <p>지자체장 및 지방의회 제안서 발송 (~2011년) → 조례안 개정 입법발의 (~2012년 3월) → 조례안 개정 (2012년 상반기내)</p>
중장기 (2013-2020)	동 원 (현장의 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노조법 취지에 맞춰 산별노조 전환 조직적 전개 (2013년~) <p>산별노조 전환 TF/T 구성(2012년내) → 산별노조 전환 매뉴얼, 공동교안, 토론회 배치 → 우선전환조직선정, 역량 집중(2013년중) → 산별노조 전환 모델 마련 (2014년내) → 전조직적 전파 → 조직적 확산 (~2015년)</p>
	연 대 (여럿이 함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적 경제사회의제 마련을 위한 노동시민사회연석회의 구성 및 여론조성 활동
	참 여 (정책제도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층적노사관계체계 마련 <p>노사정위원회법 개정(중앙기구의 독립성, 대표성 강화) → 지역, 산별·업종단위 노사정테이블 구성(2013년내) → 대화와 교섭 개시(2014년내) → 교섭 안착화 및 단체협약 체결(~2015년)</p>

2. 5대 조직-연대 과제

1) 조직운영 과제

(1) 핵심과제 -1

지속적인 노조조직률 하락 등 노동운동의 위기를 극복하고 당면한 노조법 개악 등 정부와 자본의 공세에 힘 있게 투쟁을 전개하기 위하여 100만 조합원으로서의 조직 확대와 유사산별 통합 및 산별노조 건설을 통한 조직 강화를 핵심과제로 선정하였다. 또한 복수노조시대, 조직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직의 양적 확대와 함께 조직운영의 자주성, 민주성 제고 등 조직의 내부혁신을 또 다른 핵심과제로 선정하였다. 끝으로 조직경쟁으로 인한 조직간 갈등과 분쟁을 극복하기 위하여 노동운동 진영의 단결과 통합을 장기과제로 선정하였다. 더불어 민주시민단체 및 개혁진보진영과의 연대강화도 조직-연대부문의 핵심과제로 선정하였다.

열세번째. 100만 조합원 복원 및 제1노총 위상강화	열네번째. 유사산별 통합 및 산별노조건설	열다섯번째. 조직운영의 혁신을 통한 자주성 및 민주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강화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조직확대 캠페인 • 조직활동가양성 • 사회연대적 조직화 전략 수립 및 실행 • 지역일반노조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개 대산별체계 구축 • 1산업 1노조, 1기업 1조직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원 선출 방식 및 의사결정 구조 개선 • 현장소환 및 업무감사제도 도입 • 재정자립 및 운영체계의 개선

(2) 실행계획 -1

시 기	수 단	실행계획
단기 (2012년 -)	동원 (현장의 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 산별, 지역조직 조직강화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2011년 7월 완료 • 조직확대 캠페인 실시

시 기	수 단	실행계획
201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10월~11월 공단지역 집중 실시 • 조직활동가 양성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2회이상 실시 및 평가 • 조직 확대를 위한 실태조사 및 모범사례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일반노조 현황, 이주노동자 조직 및 지원현황 등 2012년 6월까지 완료 • 산하조직 임원 선출 및 의사결정 민주성 강화를 위한 규약 및 체규정 정비
	연대 (여럿이 함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산별 및 공동 현안 조직간 교류 및 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까지 협력사업 전개 및 통합분위기 조성 - 2013년 통합 절차 구체화 및 실행 착수 • 청년, 이주노동자 등 취약계층노동자를 위한 연대와 지원
	참여 (정책제도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운영 체계 개선을 위한 규약 개정(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 조직운영체계, 임원 선출 등 - 2013년 정기대의원대회 안건 상정 • 노총 중앙 및 지역조직 재정 및 인력운영 현황, 의무금 부과 체계 분석 및 공론화 : 20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자립도, 적정한 의무금 및 필요인력 규모, 부과체계 일원화 등 • 노동기본권 보장과 산별교섭 정착을 위한 법제도개선
중기 (2014년 - 2015년)	동원 (현장의 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별연맹의 통합 및 대산별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능성이 높은 조직을 우선 선정하여 추진 • 5대 대산별연맹 체계 구축을 위한 홍보 및 조직 독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 교통물류, 금융보험, 공공서비스, 개인서비스 등 • 산별연맹, 산별노조 전환 진행
	연대 (여럿이 함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 및 산별전환 이행 점검 및 사례 전파, 정보공유
	참여 (정책제도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총 중앙 및 지역조직 효율적 운영을 위한 규약 및 체규정 개정
장기 (2016년 - 2020년)	동원 (현장의 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개 대산별노조 건설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별체계 및 지역조직 체계 정비
	연대 (여럿이 함께)	
	참여 (정책제도개선)	

(3) 핵심과제 -2

열여섯번째. 노동운동진영 연대강화와 통합 견인	열일곱번째. 민주시민단체 및 개혁 진보진영과 연대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국 1노총 견인 • 조직분쟁조정을 통한 연대와 단결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정책 의제 중심의 연대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학생, 농민, 빈민 등 대중단체와 소통 및 정책교류 강화 - 산별의 경우, 민주진보성향 직능단체와 정책 교류 강화 • 통일사업의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 통일시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준비 • 나눔연대의 제자리 찾기 및 활성화

(4) 실행계획 -2

시 기	수 단	실행계획
단기 (2012년 - 2013년)	동원 (현장의 힘)	• 산별, 지역조직간 양대 노총 공통의제 및 공동행동 마련
	연대 (여럿이 함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운동 진영의 공통 의제 및 사업 선정 • 대학생 반값등록금, 최저임금(생활임금) 인상 투쟁 전개 • 전농, 한대련 등 대중조직 대표자와 간담회 정례화
	참여 (정책제도개선)	• 대학생 반값등록금, 최저임금(생활임금) 인상관련 제도개선 요구
중기 (2014년 - 2015년)	동원 (현장의 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별, 지역조직과 진보개혁적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행동 강화 - 교류 촉진 및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공동행동 강화
	연대 (여럿이 함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운동 진영 통합과 단결을 위한 논의(협의)기구 구성 • 모범적 산별과 직능단체와의 연계지원
	참여 (정책제도개선)	• 입법기관(국회)내 노동단체의 대표성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장기 (2016년)	동원 (현장의 힘)	

시 기	수 단	실행계획
- 2020년)	연대 (여럿이 함께)	• 노동운동 진영의 통합구체화를 위한 논의(협의)기구 구성
	참여 (정책제도개선)	• 통합 조직운영 방안 마련 및 구체화